WTO시대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수정과 '중국모델'의 모색*

이문기**

Ⅰ. 머리말
Ⅱ. WTO 가입과 '중국모델' 연구의 의의
Ⅲ. WTO 시대 발전패러다임의 수정
Ⅳ. 새로운 발전패러다임과 '중국모델'
Ⅴ. 맺음말

이 글은 WTO 가입 이후 중국 제4세대 지도부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론'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며 추구하는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중국모델' 연구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사회통합 전략에서 엘리트 위주에서 기층대중 위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은 '중국모델' 담론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념적 정향 측면에서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대안 모색 노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둘째, 과거와 달리 체제전환의 궁극적 지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개혁전략, 즉 '청사진 없는 개혁전략'에서 '청사진 그리기 전략'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제어 : 중국모델, WTO시대, 제4세대 지도부, 과학적발전관, 조화사회

* 이 논문은 2006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과제번호: KRF-2006-323-B00025)

** 유한대학 중국비즈니스과 조교수 okmklee@hanmail.net

I. 머리말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한지 근 30년이 흘렀다. 30년 기간 동안 중국은 연평균 9%대의 고도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규모(GDP) 측면에서는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일인당 GDP도 $2,000 수준에 이르러 중진국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보여준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가 가장 짧은 시간동안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난 30년의 중국의 경험이 놀라운 사실은 비단 고도 경제성장 때문만은 아니다.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진행된 체제전환 과정과 서구를 비롯한 여타 시장경제 국가의 발전경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특징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장경제 전환과 사회주의적 정치질서의 유지로 특징져지는 중국의 체제전환 모델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매우 독특한 사례로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질문과 학문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30년간 중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연구와 평가도 경이적인 고도 경제성장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작업 외에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제도배열과 특징을 개념화·일반화하려는 작업, 즉 중국적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글 역시 중국적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로서 WTO 가입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발전패러다임의 수정과 신발전전략의 모색을 '중국모델'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2001년 말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의 전환단계를 넘어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어 사실상의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한 중국의 체제전환은 개혁목표와 추진방식 그리고 발전전략에

서도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체제전환 자체가 목표가 아닌 전환이후(post-transition) 시대의 발전모델에 대한 모색과 제도적 정착이 요구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WTO 가입과 거의 동시에 출범한 제4세대 지도부는 기존 지도부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통치철학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발전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제4세대 지도부 집권 3년차인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된 이래 점차 정책결정의 기조로 자리 잡은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과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론'이 그것이다. 특히 제4세대 지도부의 집권 2기를 시작하는 2007년 10월 제17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당장(黨章)에 추가시킴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중국 지도부의 상당히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제출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WTO 시대 중국의 새로운 통치이념과 발전전략의 정립과정은 중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체제의 특수성, 즉 '중국모델'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WTO 가입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전후로 체제전환과 개혁논리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WTO 가입 이전 시기, 즉 제2,3세대 지도부 시기 중국의 체제전환은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주의 패러다임과 함께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한 부단한 모색과 실험의 과정이었다. 물론 그 과정은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합의가 부단히 확대되어 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전환전략은 체제전환 '과정'상의 안정성과 단기적 성과(경제성장)에만 주목한 것이었으며, 장기적·전략적 측면에서 향후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로서의 체제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의 독특한 전환과정과 제도배열의 특수성을 일반화시키려는 노력은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성과 확신부족 때문에 폭넓은 담론을 형성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체제전환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하였고, 중국지도부의 문제의식도 모색과 실험 그리고 단기적 성과(경제성장)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전환이후 시기를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최근에 보여준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과 발전패러다임의 수정은 중국 지도부의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식 체제전환과 발전경험을 개념화·일반화시키려는 연구로서 '중국모델' 담론도 최근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출발한 이 글은 다음의 몇 가지 물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30년간 진행된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WTO 가입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체제전환의 연속선상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전환단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 함의는 무엇이고, '중국모델' 담론 측면에서 그 변화가 왜 중요한가?(제Ⅱ장) 둘째, WTO 가입과 거의 동시에 출범한 제4세대 지도부가 기존 지도부와 차별화된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고 발전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정책기조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었는가?(제Ⅲ장) 셋째, 새로운 통치이념과 신패러다임은 '중국모델' 담론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인가? 특히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WTO체제로의 편입 이후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와 체제유형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 길을 계속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제Ⅳ장)

II. WTO 가입과 '중국모델' 연구의 의의

1. '중국모델' 의 개념과 연구범위

최근 '중국모델' 담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시장전환 과정과 제도의 독특성을 단지 중국적 특수성이나 궁극적으로 서구적 수렴으로 향하는 과도적 현상 정도라는 인식을 넘어서 보편성을 가진 정치경제 체제로 이론화 시키려는 학문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시장전환 과정이 매우 독특한 것이었고, 서구적 이론과 경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는 점은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이고 이를 개념화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시장전환 과정과 경제운용 메커니즘의 특수성, 국가-사회 관계의 특징 등에 주목하여 중국 사회의 제도적 특징을 개념화하려 하였으며, 그 개념은 주로 국가체제를 설명하는 보편적 이론으로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조합주의 등의 개념을 중국적 특수성에 맞게 변용시키려는 시도였다.[1] 이에 비해 최근의 중국모델 담론은 중국의 경험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발전모델로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중국모델 담론에서 그 실체와 정의에 대한 학자들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모델 논쟁을 촉발시킨 라모(Lamo 2004)의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1) 대표적인 개념으로 관료 자본주의(bureaucratic capitalism), 중국 특색적 자본주의(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지방 국가조합주의(local state corporatism), 사회주의적 조합주의(socialist corporatism), 시장보호 연방주의(market-preserving federalism)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포함한 그 밖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소개는 Baum & Alexei Shevchenko(1999, 333-334)를 참조.

consensus; 北京共識) 개념은 더욱 그렇다.[2] 현재 연구수준에서 중국모델 담론이 갖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신선하고 가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중국적 특수성'이라는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난 30년간 중국의 시장전환 과정과 현재의 체제유형이 서구적 경험과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것으로서, '현실'과 '이론' 사이의 넓은 간극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담론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중국모델'을 둘러싼 연구와 논쟁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데, 그 개념의 실체적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시기문제로서 개혁개방 이후 시기의 중국식 발전전략인가 아니면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식 혁명노선까지를 포함하는 신중국 전체 시기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범위의 문제로서 중국모델을 경제발전모델로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사회체제를 포괄하는 체제유형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이념의 문제로서 사회주의와 막스주의의 중국화(또는 중국적 변용)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자본주의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형의 체제 모색인가의 문제이다(黃平 外 2005; 俞可平 外 2006).

이 글에서 사용하는 '중국모델' 개념은 기본적으로 중국학자 위커핑(俞可平 2006, 11)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위커핑은 "중국모

2) '중국모델' 담론을 가장 환영하고 또 논쟁을 주도하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라모가 제시한 '베이징 컨센서스'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대부분이다. 중국 학자들이 '베이징 컨센서스'보다는 '중국모델' 개념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로 '컨센서스' 개념의 지나친 남용이 오히려 중국의 성공적 경험과 그 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워싱턴 컨센서스' 개념과의 대비효과 때문에 서방의 중국권제 심리를 더 자극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俞可平(2006, 12), 庄俊舉(2006, 173-176), 鄭永年(2005) 등을 참조.

델은 세계화시대에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이 취한 일종의 사회현대화 전략이며, 이는 개혁개방과정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이고 거버넌스(治理)모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다음 몇 가지 함의를 갖는 것이다.[3] 첫째, 시기적 측면에서 중국모델 담론은 주로 개혁개방 이후 시기 중국의 독특한 발전전략과 성공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모델은 세계화에 대한 일종의 중국식 대응전략인데, 이는 세계화의 이념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모델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모델로서 간주한다. 이상의 함의를 갖는 '중국모델'의 개념은 개혁개방 이후 현재(및 이후 전망)까지를 포함하며, 특정한 이론과 이념에 기초하기 보다는 '가치중립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현실을 선진 시장경제 국가의 경험과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기존이론에 기초한 연역적 접근보다는 중국적 특수성에 주목하려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특수성을 개념화·일반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개혁개방 시기 전 과정을 귀납적 분석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2002년 WTO 시대 진입 이후 제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내용을 다룰 것이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시기 제4세대 지도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와 발전전략의 수정을 중국모델의 관점에서 조명해보려는 것이다. 물론 '중국모델'에 대한 다른 연구가 그렇듯이 WTO 가입 이전, 즉 제2,3세대 지도부 시기 중국의 발전경험 역시 '중국모델' 연구의 중요한 분석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WTO 가입 이후 제

3) 위커핑과의 인터뷰에 근거 필자가 정리. (베이징, 2007. 1. 2).

4세대 지도부가 제시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기존에 비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모델'의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 곧 세계 자본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의 국제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중국이 추구하는 발전모델과 체제유형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새로운 체제유형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글은 연구범위를 WTO 가입이후 시기 발전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분석할 것이다.

2. 체제전환과 WTO 가입: 개혁단계의 질적 변화

WTO 시대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과 그에 대한 분석이 '중국모델' 연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의 체제전환의 과정과 맥락에서 WTO 가입이 갖는 중차대한 의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1년 말 WTO 가입은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과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1978년 이래 점진적으로 진행된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은 여러 차례의 중요한 전환점을 경과했지만, 개혁단계의 질적 전환을 이룬 중요한 분기점은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이은 제14차 당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정립과 2001년 WTO 가입이었다. 전자가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한 국내적 합의 달성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제적 합의 달성을 의미하며 각각의 전환점을 계기로 중국의 체제전환 속도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었

다. 이 절에서는 WTO 가입 이후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체제전환 성격과 변화된 외부환경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1992년 이후 체제전환 노력과 개혁 내용에 대한 개괄적 평가를 바탕으로 중국식 시장전환 논리의 연속성과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한 국내적 합의 달성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제14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선언은 개혁개방의 기조가 후퇴하는 보수적 정치상황에서 전개된 극적인 전환과정이었다. 당시 중국정세는 1989년 천안문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경제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궁극적 개혁목표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이른바 '성사성자(姓社姓資)'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극단적 이분법에 따른 개혁성격 논쟁은 필연적으로 이념적 색깔 논쟁으로 발전되고 결국 보수적 정치세력의 입지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개방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던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라는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선전하고 시장경제 도입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개혁세력이 다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馬立誠 外 1998, 157~226).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정립은 이듬해 당 14기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관한 약간의 문제 결정>(이하 <결정>)이라는 문건을 통해 구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결정>에서는 "전면적 추진 중점돌파(整體推進 重點突破)"로 표현되듯이 더 이상 주변부 개혁이나 새로운 경제요소 도입을 통한 외연확장(增量改革)이[4] 아닌,

4) Naughton(1995)은 이러한 개혁방식을 '체제 밖에서의 성장(growing out of the

기존 체제의 핵심영역에 대한 개혁방침(存量改革)을 분명히 했고 중점 개혁과제로서 재정세제 개혁(分稅制 실시), 금융체제 개혁(다양한 상업은행 설립), 외환관리체제 개혁(이중환율제도의 단일화), 국유기업 개혁(현대적 기업제도 건설), 사회보장제도 개혁(국가중심에서 국가-시장보완 기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5, 519~548; 吳敬璉 2003, 75~80).

이런 방향성 위에서 장쩌민(江澤民), 주룽지(朱鎔基)가 이끄는 제3세대 지도부는 1990년대 중후반 파상적인 경제체제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이시기 빠르고 과감한 개혁은 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점차 상당한 사회적 저항과 외부적 위기요인에 직면하면서 개혁동력이 약화되었다. 1999년 11월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확정지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시기 개혁지도부가 느끼는 개혁동력 상실이라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 즉 WTO 가입이라는 외부효과를 통해 국내 개혁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이었다(Lardy 2002). 사실 1986년부터 시작된 WTO(1995년 이전은 GATT체제)가입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개발도상국 자격 등 자국에게 각종 예외적 조치(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가입해도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1998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갑작스런 입장선회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개혁지도부가 직면한 개혁동력 상실이라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면서 내린 정치적 결단 때문이라 할 수 있다.[5]

---

plan)'으로 표현했고, 중국에서 '增量改革'으로 표현했다(吳敬璉 2003, 55~69).

5)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동력 약화와 체제전환의 위기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첫째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사회적 저항의 확산, 둘째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셋째 1999년 미국의

2001년 12월 중국은 WTO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이미 합의한 각종 관세인하, 규제완화, 국내법 개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WTO체제 편입은 중국의 시장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규범과 점차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1992년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적 합의 달성 이후 국제적 합의 달성으로서 개혁단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로써 중국의 체제전환은 더 이상 역전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으며, 적어도 경제체제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로 변모한 것이다. 물론 이런 표현이 WTO 가입을 기점으로 중국의 체제전환 과제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체제전환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개혁목표와 추진방식 그리고 발전전략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WTO 시대 중국은 당면한 개혁과제 완성과 함께 향후 다가올 전환이후(post-transition) 시대의 발전모델과 체제유형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만 개혁동력의 확보가 가능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III. WTO 시대 발전패러다임의 수정[6]

1. 성장만능주의 패러다임의 한계와 '성공의 위기'

유고대사관 피폭 사건을 계기로 분출된 반서구화와 대중민족주의 고조로 인한 개혁지도부의 정치적 입지 약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Lardy(2002), 백승욱(2002), 이남주(2002), 秦晖(1998) 등을 참조.

6) 이 절은 필자의 기존 논문(이문기 2006)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체제전환 측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 진입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환경변화 뿐 아니라, 과거 25년간 진행된 개혁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많은 내부적 위기요인에 직면하였다. 1990년대까지 중국의 체제전환은 철저하게 성장우선주의 논리에 기초해서 그 정당성을 찾으려 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가 놀랄만한 고도성장을 이루고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의 정치적 정당성도 유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 모순과 위기요인이 증폭되었다. 이른바 '개혁의 역설' 혹은 '성공의 위기'로[7] 불리는 중국의 내부위기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치이념의 공백이다. 오늘날 중국은 전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이 상실되었고, 통치이념은 사실상 공백상태에 다름 아니다. 중국 현대사의 전개는 개혁개방 정책 실시를 전후로 모든 문제의 이념화, 정치화의 시대에서 탈이념화, 탈정치화 시대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계획경제 시기인 마오쩌둥 시대의 이념과 정치중심의 논리는 개혁개방 이후 실용주의적 경제중심의 논리로 대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으로의 개념적 변천을 거쳤고,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과 중국공산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단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Sun 1995; 이희옥 2004; 이남주 2005). 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역으로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사회주의와 당의 역할에 대한 재해석 작업으로서 가장 최근에 전개된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역시 정통 사회주의 이론의 발전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현재 중국이 당면한 이념적 공백의

7) 이러한 개념의 사용과 중국공산당의 통치위기를 다룬 연구로는 Goldman and MacFarquhar(1999), 김재철(2005), 서진영(200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할만한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홍영 2003, 8). 이러한 통치이념의 공백에다 근절되지 않는 당간부들의 부패와 전횡 때문에 현재의 일당체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념 상실과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중국의 부패유형은 크게 지대추구형, 지하경제, 세수유실, 공공투자 및 지출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이 당정 고위간부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이다. 부패로 인한 중국의 경제손실은 1990년대 후반 매년 GDP의 13.2~16.8%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胡鞍鋼 2001, 34~66).

이와 같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의 약화와 당정 간부의 부패는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중국이 체제전환을 순조롭게 진행한 데는 비록 수사적 의미로 사용되면서 점차 퇴색되었다 할지라도,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가치가 통치정당성의 중요한 기초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전사회적 신념의 약화와 당간부에 대한 불만의 확산은 중국공산당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중국공산당의 통치능력 제고를 위한 통치이념의 전면적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의 위기이다. 그 동안의 성장만능주의 발전정책이 초래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급속하게 진행된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이념이 사실상 공백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통치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경제적 성취 때문이었다. 하지만 WTO 시대에도 과거와 같은 성장만능주의 발전전략과 경제적 성과만으로 사회적 통합이 가능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놀라운 성공신화의 이면에서 사회갈등과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불안요인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3대 격차', 즉 지역간, 도농간, 계

층간 빈부격차에 따른 중국사회의 갈등과 불안정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상하이와 가장 못사는 구이저우성(貴州省)간의 소득격차(1인당 GDP)는 2006년도 기준으로 13:1에 이르며, 동·중·서부간 소득격차는 1:0.52:0.40 수준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6년 기준 3.28:1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 주민들이 받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고려할 경우 실제 격차는 6: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계층간 소득격차에서는 2006년 기준 상위계층 20%와 하위계층 20%간의 격차는 6.5배에 달하며, 지니계수는 0.5 수준에 이른다(汝信 2007, 339~340). 중국의 빈부격차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평균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중의 하나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경제적 권익을 주장하는 집단시위(群體性事件)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시위건수는 연평균 17%씩 증가하여, 최근에는 크고 작은 시위가 하루 평균 200여 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개혁개방 30년의 결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비약적인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극심한 내부불균형과 양극화의 위험요인이 동시에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을 이반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의 통치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서진영 2005).

세 번째 위기요인은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의 위기이다. WTO 시대에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외부의 중국전문가는 물론 중국 국내의 관변 싱크탱크에서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전략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성장만능주의 발전전략의 후과로 초래된 구조적 위기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

국 성장의 발목을 잡히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 외에도, 만성적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에 따른 자연의 역습에 대한 우려, 외자와 대외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 따른 대외적 위기요인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금융시스템과 국가독점 산업의 개혁지체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고민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적어도 향후 20년 이상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신규일자리 수요를 지속적적으로 흡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이다. "제11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이하 "十一五") 제정 당시 향후 10년간(2006년~2015년) 노동력 수급구조를 예측한 분석에 따르면 매년 약 1,7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8]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1% 증가할 때 신규 일자리가 약 100만 개 정도 늘어난다는 추산에 근거할 때(Chow 2005, 80), 연 경제성장율 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더라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9] 중국이 향후 20년 이상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런 필요성은 결국 과거 성장만능주의 발전전략의

8) 이 수치는 신규 취업수요의 3대 원인인 인구 자연증가율(매년 500~700만 명),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면직(下崗) 노동자(매년 239만 명), 현재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 유입 인구(매년 약 1,000만 명)를 종합하여 예측한 분석이다. 세 가지 요인 중 인구 자연증가율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통제된다면 2015년 이후에는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는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中國人民大學課題組, 2005).

9) 중국이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성장율은 다른 개도국보다 훨씬 높은 7~8% 수준이 되어야 한며, 만약 5% 이하로 떨어지면 중국 사회는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Chow 2005, 80-81).

후과를 극복하려는 중국지도부의 정책수단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고도성장의 유지를 통해 성장의 후과를 치유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2. 새로운 통치이념의 모색

WTO 시대 진입과 거의 동시에 출범한 중국의 제4대 지도부는 2020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이른바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이희옥 2005). 또한 제4대 지도부는 출범시부터 기층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친민적(親民的) 이미지를 보여주는 등 이전 지도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당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가 당대회에서 각급 대표들을 향해 정중하게 머리 숙여 인사하거나,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가 스스로 빈농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농촌 지역 현지 시찰을 자주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10] 제4세대 지도부의 정책적 차별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집권 3년차인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통치이념이자 정책적 목표로서 '조화사회 건설론'을 제시하였고 정책수립의 이론적 기초로서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였다.

두 개념은 워낙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상당부분 중복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과학적발전관이 "인본주의(以人爲本)에 기초한 전면적, 협조적,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요약되고, 조화사회론은 4가지 측면

10) 후진타오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와 장쩌민 중심의 제3세대 지도부의 리더쉽 스타일과 정책 방향의 차별성에 대한 분석은 Li(2005)를 참조.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 발달지역과 저발달지역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의 조화)에서 균형잡힌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두 개념의 구체적 함의는 사실상 중복되는데, 과학적 발전관에서의 '전면적 발전'은 조화사회론에서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협조적 발전'은 '발달지역과 저발달지역 간의 조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구별하자면, 상대적으로 '조화사회론'이 정치사회적 안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통치방향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통치철학의 성격이 강하다면, '과학적 발전관'은 주로 발전전략과 경제사회 정책 수립의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정책이념(policy ideas)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문제는 각 개념의 핵심적 내용이 과거 제2,3세대 지도부 시기의 발전전략과 통치이념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패러다임 수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제2,3세대 지도부 시기 발전전략의 기조가 '생산력 표준론'에 입각한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 발전과 '경제성장 제일주의'였다면, 제4세대 지도부의 신발전관은 단순한 양적 성장으로서의 경제발전이 아닌 경제, 사회, 의식(문명)의 동시적 발전을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질적 성장론' 또는 '총체적 발전론'이라 할 수 있다.

3. 새로운 발전패러다임과 정책기조의 변화

WTO 시대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수정과 새로운 발전전략은 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뚜렷이 보여준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과거의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양적 성장'에서 공동부유론에

입각한 '질적 성장'으로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고,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과거의 '엘리트 위주의 사회통합정책'에서 '기층 대중위주의 사회통합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 측면에서 제4세대 지도부가 인식하는 핵심적 고민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Naughton 2005, 2). 첫째, 지난 시기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최소 20년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단순한 양적팽창을 넘어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좀 더 공평하고 폭넓게 향유될 수 있는 발전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지속적 성장'과 '발전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제4세대 지도부는 이를 위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과 정책변화는 2006년 제10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十一五"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었다. "十一五"에서 통과된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한 새로운 성장방식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추구한다.

첫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외자 및 수출주도형에서 내자 및 내수주도형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지난 시기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 노동력, 자연자원 등 기본 생산요소 투입과 대외무역의 고도성장에 의해 얻어진 결과였으며, 상대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요인은 미미한 것이었다. 중국의 2차 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30, 일본의 1/18, 프랑스의 1/16, 독일의 1/12. 그

리고 한국의 1/7에 불과하다(馬凱 2004, 4).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위주가 아닌 투자위주의 양적 팽창에 치중한 저급한 비효율적 경제구조임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에 따른 과도한 무역의존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5년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70%를 넘어섰으며, 이는 내수경제와의 균형 측면에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裴長洪 外 2006; 賀旦 2005; 張旭宏 外 2005). 실제로 2007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켰는데, 과거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내·외자 기업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키로 함으로써 외자우대 정책이 크게 축소되는 추세이다.[11] 뿐만 아니라 외자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낮은 노동집약산업이나 환경오염 산업 등에서는 강력한 진입억제 정책을 펼치기로 하였다.

둘째, 자연환경 친화성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는 성장방식으로서 이른바 '절약형 사회(節約型 社會)'와 '순환형 경제'를 추구한다. 방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은 절대량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많은 자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영토에 비해 인구는 더욱 많기 때문에 인구 일인당 부존자원은 세계 평균치의 1/3수준에도 못 미치는 자원부족 국가에 해당한다.[12] 특히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

---

11) <기업소득세법>의 핵심 내용은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세율과 우대정책 등에서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단일화한 것이다. 사실 기존의 법률과 조례에서도 명목상으로는 내·외자 기업 모두 33%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세율은 각종 우대정책으로 내자기업의 경우 평균 25% 수준, 외자기업의 경우 평균 1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번 신법에서는 내·외자 기업 모두에 대해 명목 세율을 25%로 통일시키고, 각종 우대정책을 대폭 폐지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전문 및 번역본은 다음을 참조.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7-03/19/content_5866048.htm; 『중소연구』 (부록), 제31권 1호 (2007년 봄), pp.187-206.

12) 중국의 자연자원의 인구 일인당 부존량이 세계평균(일인당 부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다. 경지 42%, 담수 27%, 삼림 20%, 석유 11%, 석탄 53%, 천연

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을 무시한 개발정책과 에너지 저효율 성장구조는 중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중국의 GDP가 세계경제의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정도인 반면, 주요 자연자원의 사용량은 7~40%에 이르는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주요 자원의 세계 전체 사용량 중 중국이 사용한 양은 석유 7.4%, 석탄 31%, 철광석 30%, 강철 27%, 알루미늄 25%, 시멘트 40% 등이다(馬凱 2004, 21-25). 이러한 성장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중국의 자연자원은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고, 결국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자칫 세계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신발전전략은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면서 에너지 고효율정책(節約型社會)과 친환경 성장정책(循環型經濟)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불균형 발전정책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을 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경제성장은 덩샤오핑이 제기한 선부론에 입각한 불균형 성장전략이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농업 분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업발전에 치중하였고, 지역적 측면에서는 동남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성장 동력에서는 내수시장의 확대보다는 투자위주(특히 외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전략은 자본과 기술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가가 모든 산업과 지역을 동시에 성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성장전략이다.[13] 과

가스 3%, 철광석 71% 등이다(中國科學院資源環境科學信息中心 2004).

13) 불균형 성장론은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후진국이 특정산업과 지역에 대해 집중 투자하여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이 산업으로부터 일파만파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

거 이러한 성장모델은 중국 지도부의 적절한 정책선택이었으며, 그 결과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불균형 성장전략의 최대 맹점인 경제사회구조에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한계상황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十一五"에서 강조하는 '도농간, 지역간 협조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등의 정책목표는 기존의 불균형 성장론에서 균형성장론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위한 발전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자주적 혁신능력(自主創新能力)'의 제고를 강조하면서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추구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공업화 전략은 방대한 시장과 저임 노동력의 강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WTO 가입과 경제적 세계화의 가속화 등 변화된 국내외 경제환경의 조건에서 자본과 기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자체기술력을 확보해야만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었다(李曉華 2004). 과도한 외자의존은 기술이전 효과에서도 회의적일 뿐 아니라, 국내 시장개척과 비즈니스 기회포착에서도 국내기업(특히 사영기업)은 외자기업에 압도되면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강한 경고도 제기되었다(Huang 2003).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전략은 곧 과거 외자도입과 산업기술정책의 중요한 기조였던 '시장-기술 교환전략'을 '자체기술 개

해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허쉬만(A. Hirschman)이 주창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론은 필연적으로 정부주도형, 투자주도형,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며, 일정한 경제성장 단계에 이르면 양극화가 심화되며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차별받은 부문의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균형성장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대표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에 해당한다(김대식 외 1993, 942-947).

발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은종학 2006).

이처럼 제4세대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직면한 두 가지 근본적 문제, 즉 '지속적 성장'과 '발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전환의 정책기조는 과거의 "양적성장, 불균형 성장, 대외의존형 성장방식"에서 "질적성장, 균형성장, 내부역량 중심의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2) 사회통합 방식의 변화: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중국사회에서 자율성을 가진 많은 조직과 개인의 출현을 수반하였다.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타도와 개조의 대상이었던 사영기업가 집단이 신흥 경제엘리트로 성장하였고, 많은 신흥 사회단체가 출현하였다. 이들 사회단체 중 풀뿌리형 NGO단체는 환경, 인권 등 이슈에서 당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대안을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중국적 시민사회' 출현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평가도 있다(이남주 2007). 이처럼 중국의 시장화 개혁은 국가-사회관계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국 지도부에게도 사회적 다원성과 자율성의 증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제3세대 지도부의 기본 전략은 이들 신흥 사회단체와 계층에 대해 정부조직과의 제도적 연계(institutional links)를 통한 정부 의존적 조직으로의 유도와 당 내부로의 융합을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신흥 사회계층으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인 사영기업가의 경우 대형 사업기업가는 중화공상련(中華工商聯)을, 중소형 사영기업가는 사영기업회를, 그리고 고용인원 8인 미만의 개인자영업자(個體

戶)는 개체노동자협회를 매개로 사실상 당과 정부의 통제 속에서 제한적인 이익집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다(Unger 1996; Nevitt 1996; Wank 1999). 즉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전통적 이념에서 볼 때 가장 비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신흥 엘리트 집단을 중국공산당 내부로의 융합과 포섭전략을 통해 당과 정치체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려 하였다(Dickson 2004). 이런 전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에 입각한 사영기업가의 입당 허용 방침이었다. 그런데 가장 비사회주의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신흥 엘리트들에 대한 융합전략은 역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의 이반현상을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층대중은 개혁개방 정책의 경제적 혜택에서도 소외되었고, 정치적 위상에서도 주변세력으로 밀려난 것이다. 최근 중국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기층의 집단시위가 대부분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가장 비사회주의적 집단이 중국공산당의 통치안정을 지탱해주는 주요 지지층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이 장기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혼란과 통치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4세대 지도부가 출범 이후 보여준 친민적 이미지 제고와 이른바 '삼농문제(三農問題)'에 대한 강조는 그동안의 사회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표현이다.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업세 전면 폐지와 2008년부터 시작된 <노동계약법>발효를 들 수 있다. 2005년 12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농업세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14] 또한

14) 1958년 제1기 전인대에서 제정된 <농업세조례>에 따라 매년 경작지 1무(畝)당 생산량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업세로 징수하였다. 조례 폐지로 농민 1인당 매년 120위안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중앙정부는 또한 농업세 폐지에 따른 지방

2007년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은 도시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대표적 조치로 평가된다.[15] 이러한 변화는 과거 2,3세대 지도부 시기에 비해 농민, 노동자 등 기층대중 친화적인 정책이 크게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엘리트 중심의 사회통합 방식'에서 '대중 중심의 사회통합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개혁개방 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의 새로운 지지층인 사회 엘리트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중국공산당의 포용과 융합대상이 더 확대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기층대중 중심의 사회통합 노력이 지도부의 생각대로 중국공산당의 통치정당성 강화로 귀결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나온 중요한 변화이며 향후 국가와 사회관계의 변화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부족 보조와 농촌의 의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1,000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法制網 2007).

15)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노동법>에서 '노동계약' 부분만을 떼어내어 특별히 보완한 법으로서, 2006년 3월 전인대에서 초안이 공포된 이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6월 28일 통과되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본측과 노동측의 이견이 충돌하면서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대체로 노동자의 권익 강화라는 원래의 취지는 대부분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기간제(固定期間) 근로자가 연속 2회 이상 계약하거나,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는 종신계약(無固定契約)을 인정한다는 조항(제14조) 등 근로계약에서 사측의 일방적 전횡을 제한한 부분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크게 확대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노동쟁의중재법>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전망이며, <노동기준법>, <임금보장조례> 등도 초안 마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서는 喬健(2007, 267-278),백승욱(2007), 김영진(2007) 을 참조.

Ⅳ. 새로운 발전패러다임과 '중국모델'

중국모델 담론 측면에서 볼 때, 제4세대 지도부가 제시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은 개혁의 내용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첫째,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신패러다임의 이념적 정향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성이 강한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개혁논리와 방식 측면에서, 과거의 개혁논리가 주로 개혁과정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궁극적 목표와 방향성이 모호한 전략이었다면, 신패러다임은 중국 사회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신패러다임의 이념적 정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제4세대 지도부 시기 발전패러다임의 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는 WTO 가입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정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오히려 신자유주의 이념의 무비판적 확산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중국적 정책이념(policy ideas)을 모색하려는 한다는 점이다. 즉 과거 제2,3세대 지도부 시기의 발전모델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념의 전면적 수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나마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확산되어 온 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을 중국식 개념을 통해 요약하자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쌍궤시기(雙軌期: 1984~1991년)'에서 시장경제 기제가 중심이 되는 '전궤시기(轉軌期: 1992~2001년)'로 전환과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세계

적 시장경제 질서로 편입되는 '접궤시기(接軌期: 2002년~현)'로의 전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영경제 부문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일부 중소형 국유기업과 향진기업 등 공유제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통신 분야 등 전통적 국가독점 산업 분야까지도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를 통해 비록 제한적이나마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다소 거칠지만 개괄적으로 정리하자면, 1990년대까지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은 "적극적 개방화, 제한적 사유화 및 자유화(규제완화)의 확대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의 핵심내용을 사유화, 자유화, 개방화의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때,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부분적 수용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되,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을 부분적·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이러한 제한적 수용은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에 대한 서구의 주류 이론에 따르면, 주로 국민국가의 약화와 경제사회 정책에서 국가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과정은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토대위에서 국가의 역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매개되고 통제되는 개방화 전략을 취했다(김재철 2000; Zheng 2004). 이는 적어도 중국의 경험에서는 세계화의 확산이 곧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WTO 가입 이후, 제4세대 지도부 시기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수립에서의 정책이념은 어떠한가? WTO 체제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곧 신자유주의 이념체제 속에 더욱 깊숙이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WTO

가입을 전후한 1990년대 후반 시기를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이 중국의 주류로 자리매김 된 시기로 규정하고, WTO 시대에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는 강한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6] 주로 신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론'을 통해 제4세대 지도부가 상당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Fewsmith 2005). 특히 최근 보여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확대와 빈부격차 완화정책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공평성'에 대한 강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쟁점 중 하나인 "효율-공평 관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기본입장이 변화하였는데, 2004년 당 16기4중전회에서 "사회공평을 더욱 중시하고(更加注重社會公平)"라는 문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효율을 우선하며, 공평을 동시에 고려하는(效率優先, 兼顧公平)"이라는 문구를 대체하였다. 즉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에서 '공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다(王振鋒 外 2006).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논리가 강화되고 제4세대 지도부가 제출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적 추세를 강화하기보다는 중국적 독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 '중국모델' 담론을 더욱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 학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4년 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 개념 제기가 담론 확산의 하나의 배경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중국 지도부와 관변 학자들의 조직적인 대응 노력 때문이었다. 2004년 초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의 이데올로기 부문을 관장했던 리창춘(李長春)이 라틴아메리카를

16) 지난 시기 중국의 개혁과정을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무비판적 확산과정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한 대표적인 원로학자는 류궈광(劉國光)이다. 그는 2005년 중국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이에 기초한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일련의 글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여 중국 내부에 이른바 '유국광 선풍'으로 불리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劉胎清 外 2006).

방문했을 때,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리창춘은 귀국 후 즉시 중국사회과학원에 연구소조를 조직하여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게 하였다. 물론 보고서는 신자유주의 위험성과 라틴아메리카, 소동구 국가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시키면서 중국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당 내부의 참고자료로 널리 유포시켰다는 것이다.[17]

이상의 근거만으로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시기의 신발전전략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에 대한 전면적 극복이나, 혹은 신좌파적 입장이 주류이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해석은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 WTO 가입 이후 시기 들어, 중국 관변 학자들의 담론구조와 지도부의 문제의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18] 나아가 이런 비판적 문제의식이 제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 즉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론'의 이념적 바탕에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중국의 발전모델이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극

17) 중국 학자와의 인터뷰(베이징: 2007년 1월 1~2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소조의 결과물은 책(何秉孟 2004)으로 출판되었다.

18)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후 이러한 비판담론은 학자 및 관료들 사이에 매우 격렬한 비공개 토론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3월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주요 씽크탱크 지도자와 현직 관료 등이 비공개로 개최한 "중국 거시경제 및 개혁추세 좌담회(中國宏觀經濟與改革走勢座談會)"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주로 신좌파 세력(개혁반성파)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개혁 주류세력(개혁심화파)을 공격하면서 전개된 격렬한 토론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른바 '제3차 사상논쟁'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노선과 신좌파 노선간의 논쟁은 『中國與世界』(2006, www.zgysj.com/2006/200605a.htm)에 소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소개 및 평가는 서석흥(2006), 조영남(2006)을 참고할 수 있다.

복하면서 '중국식 제3의길'을 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WTO 시대 중국의 발전모델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세계화 추세의 편승과 국내 시장화 개혁의 필요에 따른 도구적 수준의 제한적 수용에 그칠 것이며, 궁극적인 지향은 중국식 발전모델을 부단히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패러다임과 개혁논리의 변화: '청사진 없는 전략'에서 '청사진 그리기 전략'으로

WTO 가입 이후 시기 신발전패러다임은 개혁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과정 중심'의 논리에서 '목표지향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의 방식이 주로 순조로운 체제전환, 즉 '전화과정' 그 자체에 주목한 것이라면, 신패러다임은 '과정'으로서의 개혁방식보다는 궁극적 지향과 '목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지난 시기의 '과정 중심의 개혁논리'(錢穎一 1999)는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언급한 이래 중국의 개혁전략을 설명하는 대표적 논리로 비유되는 "돌다리를 두드리면 강 건너기(摸着石頭過河)"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 표현의 함의는 개혁 순서와 속도의 점진성, 그리고 개혁 목표와 방향의 모호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전략을 '청사진 없는 개혁전략'이라는 표현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즉 과거의 전략은 개혁(또는 전환)의 궁극적 목표와 방향보다는 개혁과정상의 단기적 안정성과 방법론을 강조한 것이었다.[19] 당연히

19) 치엔(錢穎一 1999)은 중국식 개혁전략의 성공적 경험은 전통 주류경제학적 입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연구자들의 시각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의 성공은 '개혁 목표'보다는 '개혁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치엔이 언급하는 '개혁 과정'의 상대개념으로서 '개혁 목표'는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개혁 목표'

지난 시기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의 이념적 기초는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었으며, 중국공산당은 개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의 근거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나 이념적 지향보다는 주로 양적 팽창으로서의 경제성장 그 자체에서만 찾아야 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점진성과 실험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개혁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혁단계의 질적 변화에 따라 점차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듯이 지난 시기 소련 및 동구 국가에서 개혁목표만을 우선시한 이른바 충격요법식 급진전략이 실패하고 중국식 개혁전략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20] 문제는 지난 시기 중국의 전환과정에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 건너기"식의 '과정 중심의 개혁전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견지해야만 할 유효한 개혁논리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魏加寧 2005).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시기가 개혁단계의 질적 변화와 함께 개혁목표와 방식도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WTO 가입 이후 근본적으로 바뀐 개혁조건(Ⅱ장 2절)과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의 후과로 초래된 내외부적 위기(Ⅲ장 1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범위와 목표, 그리고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0년대 중국은 지난 시기 개혁의

와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이 글 역시 중국이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을 권고한 서구 학자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지엔의 관점과 동일하다. 하지만 과거 중국 지도부는 개혁목표를 반신자유주의적으로 설정했다기 보다는 개혁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 제4세대 지도부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최근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신발전전략은 그 문제의식의 정도에서 볼 때 '과정' 뿐 아니라 개혁의 궁극적 '목표'에서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0) 체제전환 과정에서 소련 및 동구 국가의 실패와 중국의 성공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초기조건'보다는 '개혁전략'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는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Nolan(2004, 17-44)를 들 수 있다.

성과가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데 부정적 장애요인을 생산하는 이른바 '개혁의 역설' 혹은 '성공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중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비전제시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발전 동력의 상실은 물론이고 결국 중국공산당의 통치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개혁단계의 질적 변화는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진행한 <정부공작보고>에서도 확인된다. 원자바오는 "개혁은 이미 경제영역에서 더 깊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개혁 범위가) 문화교육체제, 과학기술체제 등을 포함한 사회체제 영역으로 확대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추진단계에 진입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제4세대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사회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서 '조화사회 건설론'과 그 방법론과 이론적 기초로서 '과학적 발전관'은 이런 배경에서 제출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발전패러다임의 수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개혁방식 측면에서 과거의 '청사진 없는 개혁'에서 '청사진 그리기 개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개혁범위 측면에서는 '경제체제 중심의 개혁'에서 '정치사회 체제를 포함한 개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모델 연구의 시각에서 개혁논리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체제전환의 궁극적 지향과 목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명료해짐으로써 향후 중국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과정 중심'의 개혁논리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독특한 경로와 제도배열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일반화된 발전모델로 설명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는 중국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의 부재라는 이유도 있지만, 중국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WTO 가입 이후 제4세대 지도부가 제출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은

'목표 중심'의 개혁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장기적·전략적 대안 모색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확인되었으며, 그 구체적 전략과 지향도 과거에 비해 점차 명료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구체적 방향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개방전략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무비판적 확산을 경계하는 중국식 체제모델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중국의 진로 역시 과거 전환과정과 유사하게 중국의 독특한 발전경로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발전모델과 체제유형을 설명하려는 '중국모델' 연구의 의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WTO 가입 이후 시기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중국모델' 연구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체제전환의 맥락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한 국내적 합의와 국제적 합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2002년 출범한 제4세대 지도부는 이러한 전환단계의 질적 변화라는 객관적 환경변화와 함께, 이전 시기 성장만능주의 발전패러다임의 부작용을 치유해야 할 내부적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2004년부터 제출된 새로운 통치이념으로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론'이었다. 새로운 통치이념에 기초한 발전패러다임은 주로 경제·사회정책의 기조에서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였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불균형 발전론에 기초한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균형발전

론에 기초한 질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 전략에서는 엘리트 위주의 통합전략에서 기층대중 위주의 통합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모델' 담론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먼저 중국식 발전모델의 이념적 정향 측면에서 지난 시기(1990년대)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이 점차 확산되어 왔던 과정에 비하면, WTO 체제 편입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경계와 대안모색 노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적 발전관', '조화사회 건설론'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의 정립이 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 기초했다는 점과 빈부격차 완화와 노동자, 농민 등 소외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발전모델이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개혁 필요성에 따른 도구적 차원의 제한적 수용 수준에서 통제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향후 중국의 발전모델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전면적 거역은 아닐지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구적 수렴보다는 '중국식 제3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발전패러다임의 수정은 중국이 개혁전략과 논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과거 체제전환의 논리가 개혁의 궁극적 지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 과정상의 안정성에 주목한 '과정 중심'의 논리였다면, 신패러다임의 개혁논리는 전환 이후(post-transition) 시대의 지향과 목표를 제시하려는 '목표지향 중심'의 논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방식 측면에서 과거의 '청사진 없는 개혁전략'에서 '청사진 그리기 개혁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개혁범위 측면에서는 '경제체제 중심의 개혁'에서 '정치사회 체제를 포함한 개혁'으

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WTO 시대에 중국의 정책정향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비판적이고 심지어 매우 근본적인 대안모델을 모색하고 있음을 제4세대 지도부가 제시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과 정책기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중국의 진로 역시 과거 전환과정과 유사하게 중국의 독특한 발전경로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발전모델과 체제유형을 설명하려는 '중국모델' 연구의 의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면서 중국의 경험이 발전단계가 유사한 다른 국가에 주는 함의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한다. 과거에 보여준 중국식 체제전환의 독특성에서부터 향후 중국식 체제유형의 정립까지를 '중국모델' 혹은 '중국적 발전경험'으로 정리한다면, 그것을 단지 일국에 한정된 '중국적 특수성'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험이 30년 이상이라는 장시간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독특한 논리를 개발하고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 인류사의 어떤 국가보다도 큰 국가규모와 이에 따른 지구적 영향력(global impact)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경험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성과(performance)를 보여주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경험 혹은 중국식 발전모델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먼저 체제전환 국가에게 중국의 경험은 성공적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개혁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정치질서 즉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며, 어쩌면 전환과정에서는 더 유효한 체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Nolan 2004, 3-4). 다음으로 중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가에게 주는 함의도 매우

큰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초기 추격 전략에서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학습이 단순한 모방이나 제도의 무비판적인 이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해당 국가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창조적 학습 혹은 혁신(創新)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胡鞍鋼 2005; 崔之元 2005; 田春生 2005). 중국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독자적 발전모델의 모색과정은 '선진국 따라하기'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조건과 역사적 맥락'속에서 자기식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모델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21] 특히 선진국(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많은 개도국에게 중국의 경험은 한 측면에서는 '개방'을 통한 세계화의 편승과 다른 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창의적 혁신(創新)을 병행적으로 추구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대식 외. 1993. 『현대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김영진. 2006. "중국의 <노동계약법(초안)> 제정에 관한 연구: 주요 쟁점과 각계의 반응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0(3).

김재철. 2000. "세계화와 국가주권: 공존을 향한 중국의 탐색." 『국제정치논총』 40(3).

김재철. 2005. "서론: 개혁개방의 역설적 결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김재철 편. 『새로운 중국의 모색 I』. 서울: 폴리테이아.

21)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또는 개도국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개도국의 발전과 추격전략이 결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2002), 장하준(2004) 등을 들 수 있다.

백승욱. 2002. "중국의 WTO가입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이일영 외, 『WTO로 가는 중국』. 서울: 박영률출판사.
백승욱. 2007. "후진타오 시대 중국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계약법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9(1).
서석홍. 2006 "중국에서 경제개혁의 평가와 방향을 둘러싼 논쟁." 『(사)현대중국학회 2006년 상반기 학술대회 논문집』. 광주.
서진영. 2005. "개혁정치의 역설과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 『동아시아연구』 11.
은종학. 2006. "중국 산업기술전략의 변화." 『(사)현대중국학회 2006년 상반기 학술대회 논문집』. 광주.
이남주. 2002. "중국 WTO 가입의 정치논리." 이일영 외. 『WTO로 가는 중국』. 서울: 박영률출판사.
이남주. 2005.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론의 변화와 발전." 김익수 외. 『현대중국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이남주. 2007. 『중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서울: 폴리테이아.
이문기. 2006. "중국 제4세대 지도부 신발전 전략의 함의와 전망." 『중소연구』 30(2).
이홍영. 2003 "중국개혁의 정치적 의미," 『사상』 가을호.
이희옥. 2004.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서울: 창비.
이희옥. "중국의 국가전략: '전면적 소강사회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1(1).
장하준(형성백 옮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서울: 부키.
조복수 역. 2007. "기업소득세법." 『중소연구』(부록) 31(1).
조지프 스티글리츠(송철복 옮김). 2002. 『세계화와 그 불만』. 서울: 세종연구원.
조영남. 2006. "중국의 개혁은 어디로?: '제3차 사상논쟁' 분석."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검색일: 2006. 5. 30).
Baum, Richard & Alexei Shevchenko. 1999. "The 'State of the State'." Merle Goldman & Roderick MacFarquhar, eds.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how, Peter C. Y. 2005. "China's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 Perspective." T. Y. Wang, ed. *China After The Sixteenth Party Congress: Prospect and Challenges*. Toronto: de Sitter

Publications.

Dickson, Bruce J. 2004. "Dilemma of Party adaptation; The CCP's strategies for survival." Peter Hays Gries and Stanley Rosen, eds. *State and Society in 21st-century China: Crisis, contention, and legitimation.* New York: Routledge.

Fewsmith, Joseph. 2005 "China under Hu Jintao." *China Leadership Monitor* 14(spring).

Goldman, Merle and Roderick MacFarquhar, eds. 1999. *The Paradox of China's Post-Mao Reform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uang, Yasheng. 2003. *Selling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during the Reform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mo, Joshua Cooper. 2004.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Lardy, Nicholas R.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i, Cheng. 2005. "The 'New Deal': Politics and Policies of the Hu Administration." T. Y. Wang, ed. *China After The Sixteenth Party Congress: Prospect and Challenges.* Toronto: de Sitter Publications.

Naughton, Barry.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ughton, Barry. 2005. "The New Common Economic Program: China's Eleventh Five Year Plan and What It Means." *China Leadership Monitor* 16(Fall).

Nevitt, Christopher Earle. 1996. "Private Business Associations in China: Evidence of Civil Society or Local State Power?" *The China Journal* 36(July)

Nolan, Peter. 2004. *Transforming China: Globaliza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London: Anthem Press.

Sun, Yan. 1995. *The Chinese Reassessment of Socialism 1976-1992.*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Unger, Jonathan. 1996. "'bridge': Private Business,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Rise of New Association." *The China Quarterly* 147(September).

Wank, David L. 1999. *Commodifying Communism: Business, Trust, and Politics in a Chinese C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heng, Yongnian. 2004. *Globalization and State Transform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5. 『十四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 人民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 編. 2006. 『2006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中國人民大學課題組. 2005. "新型工業化對我國未來5~10年就業的影響," 馬凱 主編. 『"十一五"規劃戰略研究 (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俞可平 外. 2006. 『中國模式與"北京共識": 超越"華盛頓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黃平、崔之元 主編. 2005.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馬立誠、凌志軍. 1998. 『交鋒: 當代中國三次思想解放實錄』. 北京: 今日出版社.

吳敬璉. 2003. 『當代中國經濟改革』.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中國科學院資源環境科學信息中心. 2004. 『我國能源發展戰略研究』. 北京: 中國科學出版社.

何秉孟 主编. 2004. 『新自由主義評析』. 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

胡鞍鋼. 2001. "腐敗: 中國最大的社會污染," 胡鞍鋼 主編. 『中國: 挑戰腐敗』.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胡鞍鋼. 2005. "對中國之路的初步認識." 黃平、崔之元,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汝信、陸學藝、李培林 主編. 2007. 『2008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 北京：社會科學文献出版社.

劉胎清、張勤德 主編. 2006. 『劉國光旋風實錄』.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馬凱. 2004. "樹立和落實科學發展觀, 推進經濟增長方式的根本性轉變." 王夢奎 主編. 『中國的全面協調可持續發展』. 北京：人民出版社.

崔之元. 2005. "制度創新與第二次思想解放." 黃平、崔之元. 2005.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喬健. 2007. "2007년: 勞動保障立法年的中國勞工狀況." 汝信 外 主編. 『2008年 : 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秦海. 1998 "金融危機與東亞模式." 『戰略與管理』 26(1).

裴長洪、彭磊. 2006. "對外貿易依存度與我國貿易戰略調整." 『財貿經濟』 4.

李曉華. 2004. "對加入WTO後'以市場換技術'的思考." 『工業經濟研究』 4.

賀旦. 2005. "中國貿易依存度的提高對國家安全的影响." 『世界經濟情況』 22.

張旭宏、龐錦. 2005. "我國外貿依存度分析和政策建議." 『經濟叢刊』 2.

錢穎一. 1999. "目標與過程." 『經濟社會體制比較』 2.

魏加寧. 2005. "告別'摸着石頭過河'的改革方式." 『中国改革』 8.

田春生. 2005. "理解'中國模式'的制度視角." 『當代世界與社會主義』 5.

鄭永年. 2005 "切莫寡大: '北京共識'." 『信報』 (香港). (2月 15日).

王振鋒、李秀芝. 2006. "更加注重社會公平問題." 『光明日報』 (2月 20日).

2006. "'顏色革命'的急先鋒 : 新西山會議." 『中國與世界』 3. www.zgysj.com/2006/200605a.htm (검색일: 2006. 5. 30).

法制網. 2007. "財政部: 全面取消農業稅後農民人均減負120元." http://www.legaldaily.com.cn/zt/2006-01/19/content_254995.htm (검색일: 2007. 11. 5).

ABSTRACT

China's New Development paradigm After WTO and 'China Model' Research

Lee Moonki

Assistant Professor,
Yuhan College

This paper analyzed the new development paradigm that have pursued by Chinese readers after joining the WTO, in the 'China model' discourse view. The 4th generation readers group has set 'scientific development' and 'harmony society' as the new governing principle. It is intended to transition from quantity development to quality development in economic policy, and from economic elite to base people in society integration strategy. In 'China model' discussion aspect, these changes contain two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n policy ideas despite the joining to WTO, the effort to find an alternative ideas beyond new-liberalism is strengthening. Another one is a change from 'No blueprint reform strategy' to 'Drawing blueprint reform strategy' with ultimate and evident inten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system that couldn't be seen in the past.

Key Words : China model, scientific development, harmony society